

칼럼 Column

출판과 도서관의 윈윈전략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게 된 데 대해, 출판계는 지난 3월말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4월 18일에는 '한·미 FTA 저작권 분야 설명회'를 열었다. 이같은 변화가 우리 출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으나 경쟁력이 뒤지는 중·소출판사들에게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은 듯 하다. 반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출판지식산업의 비전과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시기에 출판과 도서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나라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설치문제, 독서습관의 양성과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출판진흥방안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다.

도서관정가제 강화 필요

좋은책의 출판과 재생산 구조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출판물과 독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중심적이며 강력한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중요한 수요시장으로 부각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모든 출판물의 1차 소비자는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하며 국민들은 대부분의 책을 도서관에

서 자유롭게 충분히 빌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론이 충족되려면 제도적 출판환경의 기반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세계시장을 가진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와 멕시코, 체코 등 출판시장 미발달국을 제외한 16개 국가에서는 도서관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6년 10월 일본도서관협회가 발표한 [풍요로운 문자·활자 문화의 향수와 환경 정비-도서관으로부터의 정책 제언에는 출판문화 진흥을 위해 출판물의 정가판매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판물 정가판매 제도는 활발한 출판활동을 보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탱하며 출판문화를 지켜줍니다. 도서관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보장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쇄매체의 접촉시간과 개인 구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출판진흥을 위한 도서 소비의 주체로 도서관이 나서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2006년말 현재 국내의 공공도서관 수는 전년보다 50개관 늘어난 564개관이다. 초판본 전부를 일단 도서관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정가제를 지키도록 법제

조 부 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bookcho2447@hanmail.net



화하여 출판의 위기구조를 심화시키는 할인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출판지식 강국 실현에 큰 긍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제한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도서를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도서구입 여건 확보를 위해서는 출판물의 중추적 기관 수요자인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규모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노력이 확고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 강화 제안

전국의 만 18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독서 실태 조사」결과('06년 9월)에서 지난 한해동안 '1권 이상의 일반도서를 읽었다'고 응답한 성인은 75.9%, 독서시간은 성인의 경우 평일 37분, 주말 34분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체별 접촉시간은 [인쇄매체, 평일 71분, 주말 50분] [영상매체, 평일 97분, 주말 138분]으로 나타난 바 인쇄매체보다는 [영상매체나 [정보/오락매체] 접촉시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 장려를 위해 학교 정규수업에 독서과목을 넣거나 학과시간 일부에 독서시간을 별도로 두고 교과 연계 독서를 강화하는 등의 독서교육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사서교사 확충노력은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독서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2006년 12월에 제정되어 금년 4월 5일부터 발효된 「독서문화진흥법」 제7조에 규정된 독서진흥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 운영하여 국민독서진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독서활동은 기존의 도서관 중심의 독서진흥정책에서 가정·학교·도서관·사회까지 중요한 여가 또는 학습활동으로써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독서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독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국가차원의 독서진흥정책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세계화 시대의 문화발전을 위해 출판과 도서관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 수립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며, 도서관은 출판계의 제도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정책적 접근 노력이 성숙되기를 기대해 본다. (☎)